

#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사건 일단락

광양시는 광양제철소 수재 슬래그 운송과정에서 지난 1월 발생한 낙수에 대한 처벌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행위를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광양제철소 수재 슬래그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차량에서 낙수된 물과 슬래그 탈수시설에서 발생한 시료를 채수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했다. 이어 낙수가 침출수인지 폐수인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했다. 환경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수재 슬래그 운송중 낙수된 물은 침출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건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과정 중 광양제철소는 고로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급랭해 수재 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 총 10기를 폐기물관리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시는 지난 15일 위반행위자인 ㈜포스코 관리 책임자와 ㈜포스코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고 사건을 송치했다.

이와 함께 수재 슬래그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낙수 행위는 수재 슬래그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한 책임인 ㈜포스코와 시설을 정비하는 업체 및 슬래그 운송업체에 대해 책임소재를 수사했다.

박종우 광양시 환경지도팀장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중점 착안한 사항으로, 수재 슬래그 운송중의 낙수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 낙수된 침출수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는지의 여부, 환경부 유권해석 사례와 대법원 판례 등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침출수의 성분은 구리가 0.006mg/l로 배출허용기준 대비 500분의 1수준이고 시안은 0.03mg/l로 허용기준대비 3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검출됐다.

수소이온지수는 9.0~9.28의 약알칼리성으로 나타났으며, 사건당일 차량에서 낙수돼 도로에 유출된 량이 약50l로 소량으로 추정됐다.

환경부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나 수소이온지수가 12.5이상의 강알칼리를 공공수역에 유출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그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

##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승인 고발

### 수재슬래그 운송중 낙수 행위는 처벌

시하고 있다.

이는 광양제철소의 낙수사건이 주변 환경에 오염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낙수사건의 처리를 (주)포스코 법인의 경우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로서 낙수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운송업체의 경우 차량 운전원이 작업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인정함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앞서 광양제철소는 지난 2월 1일부터 수재슬래그 생산설비를 폐기

물처리시설로 승인받기 위해 광양시와 사전 협의 거쳐 낙수행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시설 보완 대책을 마련해 지난 8일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15일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처리시설에 대해 최종 설치를 승인했다.

서경철 환경과장은 "앞으로 광양제철소에 대한 환경관리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 수재 슬래그 운송중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환경 사범은 예외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산불을 진화하라 강원 인제군은 19일 육군 12사단 울지사격장에서 각급 기관장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민·관·군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 근로정신대시민모임 “日 강제동원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해당 기업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마저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또한 피해자 개인 문제인 양 방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제에 인간 존엄을 빼앗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불가피하게 정당한 권리행사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본 기업에 동원된 광주·전남 국외 노무 동원 피해자 중, 소송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모아 현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공

익소송 형태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지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인된 22만 4835건 중 68%에 해당하는 14만 7893건이 노무동원 피해자로 드러났다"면서 "그러나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은 15건의 손해배상 소송 원고를 모두 합쳐도 1000여 명 안밖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권리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사실상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생존 피해자들은 병마에 신음하며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고 유족 또한 고통에 이른 실정이다"고 밝혔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피해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면서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방지한 채 결코 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으며, 양국 우호 또는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사죄와 함께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다음달 5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광주·전남 지역 거주 국외 노무 동원 피해자를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3월 기준 광주·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일항쟁기 강제동원 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심의, 확정된 노무동원 피해자와 유족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 동원 피해자 등이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군인·군속·학도병 동원 피해자 등은 제외된다.

신봉우 기자

## 영광 관공서서 투신 소동...30분 만에 구조

영광의 한 관공서 건물에서 4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이다 30여분 만에 구조됐다.

19일 오후 1시30분께 영광군 영광읍 한 관공서 민원실 옥상에서 술에 취한 A(44)씨가 투신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A씨는 4층 규모 건물 옥상 물탱크 위에 올라 선 채, 술을 마시며 "뛰어 내리겠다"고 소동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상에 안전메트리스 등을 설치했다. A씨는 안전메트리스 위로 떨어진 뒤 구조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 훙친 핸드폰 정보로 수천만원 인출 고교생들

훙친 휴대전화에 보관된 은행 관련 자료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계좌이체 한 뒤 인출한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9일 훙친 휴대전화로 은행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A(16)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찜질방에서 쉬고 있던 B(63)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4177만원을 자신의 은행통장으로 이체시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B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거래은행 계좌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공인인증서와 사진첩에서 보안카드를 발견하고 B씨의 계좌에 들어있던 잔액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출을 한 이들은 80만원만 남긴채 나머지 3300만원을 명품 시계와 옷 등을 구입하는데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은행에서 현금도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B씨가 머물렀던 찜질방의 CCTV를 분석해 A군 등의 인정사황을 특정해 붙잡았다.

A군이 사용하고 남긴 800만원은 B씨에게 전달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부모들이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가출을 자주 했던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요금 지불 거부’ 택시서 행패 4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요금 지불을 거부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4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5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도로에 정차한 B(27)씨의 택시 안에서 20여분 간 내리지 않고 국밥 국물을 좌석에 엷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승복 차림의 A씨는 '강원 평창군 울정사로 가달라'며 택시에 탄 뒤 요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A씨는 '장거리 운행 요금을 낼 수 있느냐'는 B씨의 질문에 '돈이 생기는 대로 지불하겠다'며 다투다 일회용 용기에 포장된 국밥을 좌석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 후사경 안 접힌 차량만 턴 4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턴 혐의(절도)로 이모(4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에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7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는 등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주차 차량 2대에서 총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